

〈번역〉

‘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井上正仁(이노우에 마사히토)**

申 東 雲譯***

I. 첫머리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동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999년 이래의 사법제도개혁작업 성과의 하나로서 2004년 4월 법과대학원제도(law school)가 창설되었고, 그 핵심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수습을 연계시킨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로부터 6년 반이 지난 2010년 현재, 일본 전국의 74개 법과대학원은 2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 가운데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수습을 마치고 이미 법률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약 4,700명이며, 변호사에 한정해서 보면 약 4,200명에 이르러 변호사 총수(약 28,900명)의 7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사법수습중인 사람들도 곧 여기에 추가되어 약 6,000명, 변호사 총수의 약 5분의 1에 이르며, 다시 2010년 9월에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더해지면 2012년 초에는 약 8,000명 가까운 수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거의 4명 중 1명이 법과대학원 수료자로 될 전망입니다(재판관 임관자는 현 시점에서 240명으로 판사보 총수(약 1,000명)의 4분의 1에 가까우며 검찰관 임관자는 182명으로 검사 총수(약 1,400명)의 약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 본고는 2010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법과 문화 포럼」에서 발표한 강연 원고임.

**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전 도쿄대 법과대학원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그런데 최근 수년간 법과대학원 내지 그 수료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몰매때리기(bashing)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명확하게 반하고, 또한 이 제도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움직임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이어서 독자적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발족하여 새로운 제도 하에서 법조인의 육성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 법과대학원의 근황에 대하여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이미 보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의 내용은 극히 단편적, 일면적인 것이 많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도 무책임한 소문에 좌우된다는지 단순한 개인적 인상을 일반화한 것 같은 것이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작업에 직접 관여하여 법과대학원 제도의 설계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법과대학원 관계위원회 등에서 전국의 법과대학원을 감독(supervision)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임해 왔습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동경대학의 법과대학원 초대원장으로서, 혹은 교육현장의 한 교수로서 그 출범이나 운영, 매일매일의 교육에 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쳐서 얻은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II.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

1. 새로운 제도도입의 계기

(1) 종래의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

2001년 6월 일본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년간의 심의를 거쳐 사법제도의 여러 가지 국면에 걸친 개혁의 제언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공표하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조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이용자인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법조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면서 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의 그 때까지의 제도는 법조인이 되는 데에 대학에서 법률학의 전문교육을 받는 것을 반드시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법조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여러 해에 걸쳐서 500명 전후), 수험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합격률이 대단히 낮아(1960년대에 3%대로 떨어지고, 1975년 전후부터는 다시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격자수가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증가하였지만 1999년 당시에도 합격률은 3.35%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수험경쟁상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수험생은 우선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수험예비교에 의존하여, 수험기술을 몸에 익히는데 매진하게 되어 각 분야의 기본서조차 읽지 않고, 패턴화된 답안을 암기하는 공부만을 거듭한 결과, 각 법률분야의 실질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논점나열식 판박이 답안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법조인이 되어도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법조인이 되는 사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혹한 수험경쟁상태의 결과로서 우수한 학생이 법조인을 지망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인의 질적 하락은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개혁의 기본 구상

그래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사법시험의 전단계로서 법조인양성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법과대학원)을 두고 그 곳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 지원자에게 필요한 전문적 소양·학력을 몸에 익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시험이나 사법수습의 내용도 그러한 전문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적 확대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에 대하여는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일본 국민의 인구비례에서 본 법조인 수를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것에 더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 또는 국내외의 폭넓은 영역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확보필요성을 고려하여 당면의 목표로서 2010년경에는 합격자수를 3,000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일본내각에서도 기본적으로 승인되어, 필요한 법개정 등을 거쳐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발족하였습니다.

2. 법과대학원의 설치와 신사법시험의 실시

(1) 법과대학원의 수와 학생수

새로운 제도 아래 설치된 법과대학원에 관하여는 그 당시부터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7~8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과대학원의 수는 전국에 20개교 혹은 30개교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대학원의 수료를 신사법시험의 수험자격으로 하는 데에는 그 전제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행해진다는 점을 담보할 만한 조건을 개개의 법과대학원이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을 충족하고 있는 한 법과대학원으로서의 설치를 인정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히려 우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부에 의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개개인이나 기업·단체의 창의와 자기책임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을 기본으로 삼으려는 규제완화의 사고방식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 법조인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지방변호사회나 유력자를 끌어들이어서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특히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해 지방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는 점도 한국과 달리 법과대학원과 그 학생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당초 법조인 배출이라는 점에서의 각 대학의 그 때까지의 실적이나 법률주요 과목들에 있어서 법과대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원의 인원수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과대학원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역량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가 발족하자 현실적으로는 74개의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어 학생수도 전국에서 1학년 약 5,800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후술 자료 1-1, 1-2 참조). 그 결과 이러한 학생의 다수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고 신사법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내각의 결정과 같이 3,000명까지 증원된다고 하여도 전체 합격률이 7~8할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상당히 낮은 숫자에 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은 출발 당시부터 명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법과대학원은 이러한 어려운 전체적 조건 하에서, 학생에 대해서는 종래처럼 단순한 수험공부에 기울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소양·능력을 몸에 익히

도록 고도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가혹한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을 탄생시부터 안고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각오한 다음에 감히 여기에 도전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2) 신사법시험의 결과

실제로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은 2010년 현재까지 5회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후술 자료 4-1부터 4-7에 나타나는 바와 같습니다만, 기수자 코스(2년 코스) 수료자만이 시험을 치러서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2006년에도 합격률은 50%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측되었던 것이며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전개상황은 저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내각의 결정을 토대로, 사법시험위원회는 2010년경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0명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후술 자료 4-1표의 합격자 목표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합격자를 증가시켜 간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의 신사법시험에 있어서 합격자수가 그 목표의 하한을 밑도는 것에 이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합격자수가 그 목표를 최하한으로부터 다시 더 내려가서 2,000명에서 2,100명 사이를 횡보하는 상태에 그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각이 결정한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지만 사실상 방침 전환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불합격자는 다시 2회 도전할 수 있어서 수험자수가 증가해 가기 때문에 합격률은 해마다 내려가서 2010년에는 2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법학기수자와 비교하여 법학미수자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3) 법과대학원에 대한 영향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법과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대학원에서 수험대책을 과도하게 의식한 지도나 학습이 행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법시험 과목 이외의 법률과목이나 기초법, 첨단·인접과목 등이 경시되면,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법과대학원 본래의 교육이념 실현이 곤란하게 되어 종래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문제되었던 학생의 시야협착 경향의 재발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후술

자료 2-1~2-3의 법과대학원 입학자 선발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법과대학원への 입학지원자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인이나 법학부 이외 학부 출신자의 지원이 격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법시험의 합격상황을 강하게 의식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법학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원への 진학을 주저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3. 법과대학원에 대한 비판과 그 논거

(1) 법조인구 증가 반대론

이상과 같이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목표를 크게 밑도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여 수료자의 질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나 정계 등의 일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법과대학원에 대하여 그러한 비판을 반복해 왔습니다.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완전한 실패라고 단정하고, 저를 비롯하여 창설에 관여한 사람들을 가리켜 전쟁범죄인처럼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실제적으로 보면 법조인구의 증가를 반대하는 움직임과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법조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향으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법서사 등의 인접직종 사람들을 필두로 하는 끈질긴 저항이 있어왔습니다만 특히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변호사회 자신의 움직임입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를 정비한 것과 함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0명까지 증원시키는 것을 제안했을 때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도 여기에 찬성하고 그 후에도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회 내부에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론은 이후 줄어들기는 커녕 법과대학원 수료자들이 다수 신입변호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대파는 2년에 한번 행해지는 일변련의 회장선거에 매 회 후보자를 내서 싸우고, 특히 지방변호사회 사이에서 점차로 지지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2010년 봄의 회장선거에서는 마침내 사법시험 합격자를 년 1,500명으

로 줄이는 것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반대파 후보자가 이제까지의 주류파 후보자에게 역전승을 거두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자체 신사법시험 합격자수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여야당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정계의 움직임에도 연결되어 제도의 개폐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예단을 불허하는 정세에 있음은 확실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이러한 변호사회 내 반대론은 일반적으로는 구제도에서 법조인이 된 사람들의 구제도에 대한 애착과 신제도에 대한 불신·의구심에 기초한 바가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 보다 실제적으로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성질의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은 기득권을 지킨다고 하는 소위 수구파 사람들이며, 이들은 어렵게 변호사가 되어 고객도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동업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경쟁이 격화되면 변호사는 상업주의 혹은 돈벌이에 매달려버리게 되어 본분에 반하는 경향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상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양극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구의 증가에 반대한다는 결론만에 있어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반대파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반대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변호사수는 이미 포화상태 내지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좌로서 변호사사무소가 신입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사법수습을 마쳐도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변호사들이 종래의 업무와 직무태도를 그대로 지키려는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금액이 많지 않아도 소비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법의 사기피해를 당했다든지 분쟁에 말려든 사례가 늘어나는 등 법적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지금도 여전히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시·정·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가 확대되고 재판원재판이 시작되어 형사변호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변호인이 형사변호를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수요에 응한 법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은 좁은 의미의 법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기업 혹은 국제

적 무대에서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재를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법적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조인이 그 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제국과 비교하여 법조인구가 현저히 적은 일본의 현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 법조인자격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그러한 직역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상업주의에 기울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연결되는 면이 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법수습을 마치고 법조인자격을 얻으면 어디에선가 기성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당연하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달콤한 환상입니다. 어느 직업에서나 지금은 취직하기 힘든 상황이며 취직해도 실력을 보이지 않으면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조만 특별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이미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말하기를, 동창생들이 다방면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므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자신들의 사무소를 설립하여 종래의 틀에 매이지 않는 폭넓은 업무를 전개하는 등 법조계의 수구적인 체제를 바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질

그런데도 보다 더 반대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 내지 그 수료자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여기에 더하여 예컨대 사법수습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법조인자격을 얻기 위한 종료시험에도 불합격되는 사람이 일정비율 있다는 점(2007년 종료자의 약 7%, 그 후 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종료시험 불합격자는 같은 정도의 비율이었습니.

이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보다 질이 높을 것인데, 동일한 불합격률이라면 이는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오히려 사법시험이라는 단 1회의 선별방식에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종료시험에 일정수의 불합격자가 나오는 것은 수습을 거친 후 재차 선별한 결과이며, 오히려 프로세스에 의한 선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법시험에 비하여 신사법시험 하에서는 합격률이 대폭 높아져서 합격자수도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합격자들이 종전이라면 합격하지 못하였을 수준의 학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종료시험의 불합격자수가 그만큼 늘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수로 볼 때 늘어난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종료시험에도 합격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수습을 마치고 법조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 법과대학원 수료자들 가운데 기초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기본과목의 기초적인 학식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서작성 등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법과대학원 쪽에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사법수습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수습내용도 변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며, 꼭 법과대학원의 교육 내지 수료자의 질을 문제시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사법수습 담당자나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받아들이는 법률사무소의 관계자 등으로부터는 자주성이나 다양성, 조사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 신사법시험에 관한 문제점

(1) 합격률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만,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상태에 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격·불합격의 결정은 시험을 채점한 고사위원의 합의에 의하며, 그 고사위원들이 실제 수험자들의 답안을 읽어보고 그 이상 합격자를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역시 전체적으로 수료자의 학력이 기대만큼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후술 자료 4-5의 신사법시험 수험자의 출신 법과대학원별 합격상황을 보여드립니다만, 최상위 주요 법과대학원과 하위 법과대학원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술 자료 4-7을 보면, 주요 법과대학원의 대부분에서는 몇 번의 신사법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료자의 65%내지 80% 가까운 사람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어서 신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학력을 몸에 익힌 사람을 합격시킨다는 기능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후술 자료 4-5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법과대학원의 교육효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법과대학원 수료 직후 시험을 친 사람들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주요 학교에서도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사법시험은 수험대책에 경도되지 않는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전제로 그 교육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숫자가 법과대학원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법조인양성 검토 워킹 팀의 지적

실제로 2010년 초부터 6월에 걸쳐서 법무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워킹 팀을 설치하여 법조인양성을 둘러싼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의 위원들이 신사법시험 자체의 모습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사법시험의 구성·내용과 법과대학원 제도나 그곳에서의 교육 사이에 적당한 정합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사법시험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각 과목들이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정합되어 있으며, 법과대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법시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술 자료 5-1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사법시험에 비해 대상이 되는 전문분야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시험시간도 장시간으로 되어 있는 외에 단답식 시험을 포함하여 시험이 수일간 집중 실시되기 때문에 수험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답식 시험의 경우 대상 과목의 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설문도 많기 때문에 수험자는 어쩔 수 없이 한 문제당 2분 정도의 초단시간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은 법률학 학습시간이 한정된 법학미수

자들에게 특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합격자 결정방법이 수험자의 전문적 학식·능력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합리성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150명이 넘는 고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총합평점 숫자와 인원수만을 단서로 삼아 복수의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는 원안을 토대로 투표로써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개개 고사위원들의 채점소감이나 전년도와의 성적차 등을 근거로 한 총론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질적 평가를 거쳐 합격라인이 결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하실 때의 일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별 과목의 전문가인 고사위원의 눈에서 보면 대다수의 답안 내용은 불만족스러우며, 채점소감은 매우 엄격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일류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각각의 과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법조인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학식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법시험 합격자의 하위층과 불합격자의 상위층 사이에 답안의 수준에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이 실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의 논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제로 되어야 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 법조인으로 출발하는 데에 최저한도로 필요한 전문 학식능력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고,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신사법시험의 구성·내용이 결정되고 매년의 합격라인도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신사법시험 고사위원회는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 없고 그 취지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채 종래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의 의식이나 감각으로 합격·불합격 결정에 임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목표치를 크게 밀돌고 있는 것을 놓고 오로지 법

과대학원의 교육이나 그 수료자의 질이 낮은 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신사법시험의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5. 법과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의 향상

(1)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 특별위원회의 보고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법과대학원 쪽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각 방면에서의 비판이나 문제점 지적을 기초로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 특별위원회는 법과대학원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검토를 행한 후 그 결과를 모아서 2009년 4월에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법과대학원에서 교육체제의 정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대학원도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술 자료 6-1과 6-2에 그 개요를 제시해 두었습니다만, ①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경쟁성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등 입학자의 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② 교육체제나 진급·수료 인정의 엄격성 등이 불충분하여 수료자의 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③ 신사법시험의 경우 수료생 가운데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나 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법과대학원이 일정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소개한 자료의 오른쪽 박스 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전체 법과대학원에 대해 그러한 여러 점들 및 더 나아가 각각의 교육체제나 학생 실태 등에 비추어 학생정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속히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주요한 점만을 간단히 소개하면 ①의 입학자의 질 확보라는 점에서는, 경쟁배수 2배 이상의 경쟁성을 확보할 것 또는 적성시험에 대해 입학최저기준을 설정할 것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②의 수료자의 질 확보라는 점에서는,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기초과목에 대해 법과대학원 학생이 수료시까지 취득해야 할 최저한의 목표인 공통적 도달목표(“코어 커리큘럼”이라고도 합니다)를 설정할 것 또는 특히 학력부족자가 많다고 지적되는 법학 미수료자에 대해 법률기본과목의 단위수를 늘릴 것, 수료자 가운데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법과대

학원에 대해서는 조직 재검토를 포함하여 발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③의 교육체제의 충실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입학자 실태나 교원의 체제, 신사법시험 합격상황 등을 토대로 입학정원 재검토나 교육과정 통합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법과대학원은 3개의 인증평가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인증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법과대학원들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히토츠바시 대학 등 주요 법과대학원을 포함한 22개 법과대학원이 제1차적으로는 불합격이라고 평가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대학원이 수치 목표를 한 가지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대학원이 적격으로 판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평가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입학정원의 재조정

입학정원의 재조정은 어디까지나 각 법과대학원의 자주성에 맡긴다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법과대학원에서는 이에 따라 입학정원 재조정이나 개선조치의 검토·실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정원에 관해서는 후술 자료 1-1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개 법과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재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이미 2010년도부터 10~20% 범위에서 학생정원을 삭감하여, 총계 900명(15%) 가까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저희 도쿄대학 법과대학원도 특히 미수자 과정 학생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지도를 행하고 법률기본과목 교원의 과잉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는 독자적 관점에서 2010년도부터 한 반인 60명(종래 정원의 20%)을 감축하여 정원을 240명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17개 교에서도 대부분 2011년도부터 입학정원을 삭감할 방침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학년 학생이 4,500명 내지 4,600명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개선상황의 추적

그 밖의 점에 관하여도 특별위원회는 위킹 팀을 설치하여 각 법과대학원에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상황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법과대학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술 자료 6-3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후술 자료 6-4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否)의 나선형에 빠진 것은 아닌가 염려됨에도 진지하게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거나 또는 개선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법과대학원이 일정 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개별 법과대학원의 이름을 명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당히 과감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위킹 그룹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법과대학원에 대해 조직재구성을 포함한 개선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후술 자료 6-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III. 맺음말

이처럼 법과대학원 측에도 살과 뼈를 도려내는 노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원재조정 등 경영상 고려도 있어서 아직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법과대학원이 소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에서는 입학자선발 경쟁비율을 확보하거나 신사법시험 합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 스스로 목을 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否)의 나선형에 빠질 우려가 큼니다. 이 때문에 축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를 넘어서서 개선을 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서 부득이 폐교되는 법과대학원도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입학자를 받지 않게 된 곳이 이미 한 학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잔혹한 말입니다만,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대학원의 수나 학생 수에 대해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유롭게 법과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법과대학원이 설치된 데에서 오는 절반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당초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도태의 프로세스에 다름 아닙니다. 개개의 법과대학원도 그러한 프로세스에 놓이게 될 것을 각오하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감히 출범하였던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기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외에도 다수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법과대학원의 제도설계에 임하여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한 구상과 일본의 법체계나 법률학 체계를 토대로 한 독자적 구상의 대립이 있으며, 그 타협의 산물로서 기수자 코스와 미수자 코스라는 이원체제의 구성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현행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유지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기능을 보다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실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후술 자료 6-2의 제3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바, 법률학 전공 신진 연구자 교원의 확보·육성이 곤란하게 되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가면 좋을까 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법과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비약입니다. 이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왕성한 학습의욕과 높은 동기부여 아래 주야로 면학에 힘쓰고 있는 법과대학원도 적지 않다는 실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도쿄대학 법과대학원에서는 신사법시험을 의식한 교육이나 지도는 일체 행해지지 않았습니니다. 법률기본과목의 경우에도 신사법시험에 그다지 연결되지 않는 수준 높은 내용의 수업이 적지 않으며, 그 밖의 과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물론 학생 가운데에는 신사법시험을 과도하게 의식한 언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름 방학기간 중에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자나 실무자를 초청하여 1주일 정도 합숙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영어수업을 받는 썬머 스쿨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편집하는 로 리뷰에 투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나가서 법률에 관하여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들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전국의 법과대학원 가운데에서는 이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법시험 등에서도 저희 교원의 기대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은 일본에 있어서는 실로 드라이이스틱한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라이이스틱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저

항이나 반발도 클 것은 말하자면 당연한 것입니다. 방심하다가 가는 이러한 저항, 나아가 반격을 받아 개혁 자체가 뒤집힐 염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로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신사법시험 수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예비시험이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애당초 구상으로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관청이나 기업에서 법무관계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수험자격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후술 자료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과목 등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부응하는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로서는 누구라도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비시험을 거친 사람과 법과대학원 수료자 사이에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시험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를 들면 주요 대학에서 법학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수 예비시험을 쳐서 합격하게 되는 사태도 생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재빠르게 법조인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 마침내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를 와해시켜 버릴 염려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요합니다.

이처럼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반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원 관계자는 이 점을 각오하면서 반드시 신념과 희망을 잃지 말고 끈기 있고 견실하게 법과대학원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료 1-1> 법과대학원 설치수와 입학정원

	국립	공립	사립	계
법과대학원수	23	2	49*	74
입학정원(2009)	1,760	140	3,865	5,765
(2010)	1,361	125	3,423	4,909
삭감법과대학원수	23	1	33	57
입학정원삭감률	▽22.7%	▽10.7%	▽11.6%	▽14.9%

* 1개 학교는 2010년도부터 모집정지.

** 입학정원 미삭감 17개교 대부분이 2011년부터 삭감할 예정.

<자료 1-2> 법과대학원의 지역배치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도쿄)	주부	긴키	쥬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법과 대학원수	4	32	(24)	11	16*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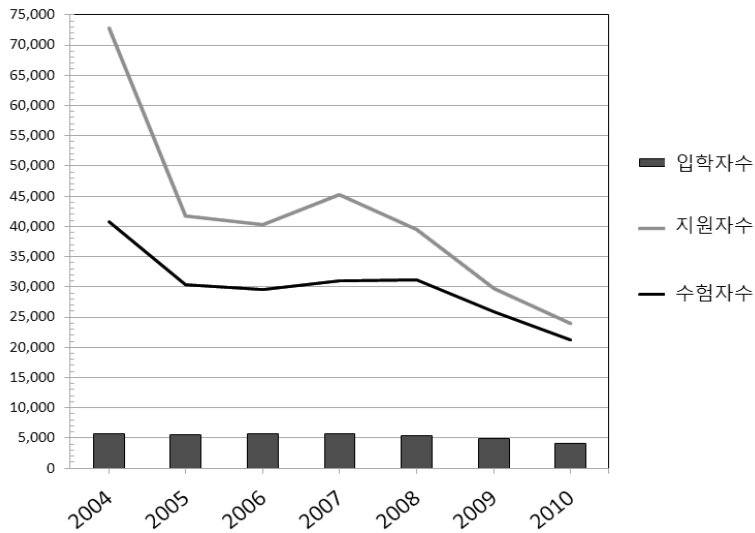
* 1개 학교는 2010년도부터 입학선발수험자의 모집을 정지.

<자료 2-1> 입학자선발상황(2004~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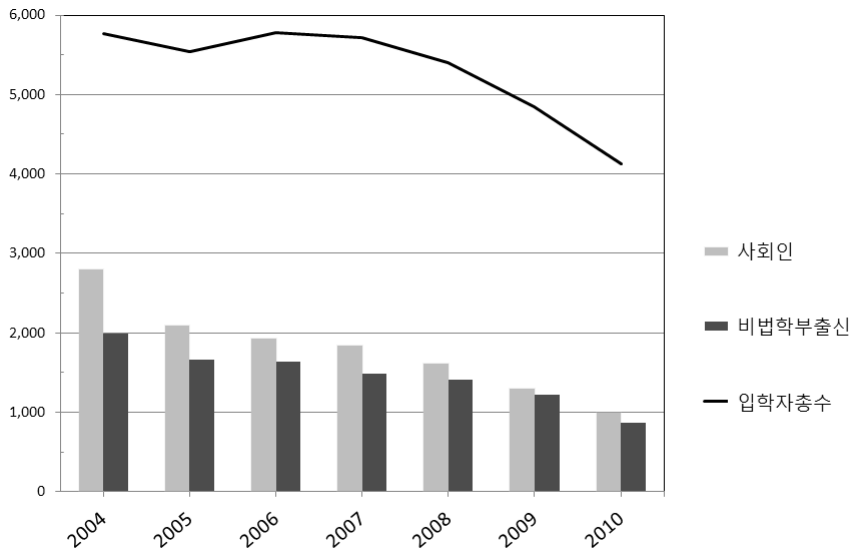
입학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법과대학원수	68	74	74	74	74	74	73
입학정원	5,600	5,825	5,825	5,825	5,795	5,765	4,909
모집인원	5,590	5,825	5,815	5,815	5,815	5,755	4,904
적성시험수험자수	53,876	33,593	27,415	27,813	25,071	20,782	17,097
입학지원자수	72,800	41,756	40,341	45,207	39,555	29,714	24,014
지원배율	13.0	7.2	6.9	7.8	6.8	5.2	4.9
입학자선발수험자수	40,810	30,310	29,592	31,080	31,181	25,857	21,319
입학자수	5,767	5,544	5,784	5,713	5,397	4,844	4,122
기수자	2,350	2,063	2,179	2,169	2,066	2,021	1,923
	40.7%	37.2%	37.7%	38.0%	38.3%	41.7%	46.7%
미수자	3,417	3,481	3,605	3,544	3,331	2,823	2,199
	59.3%	62.6%	62.3%	62.0%	61.7%	58.3%	53.3%
사회인	2,792	2,091	1,925	1,834	1,609	1,298	993
	48.4%	37.7%	33.3%	32.1%	29.8%	26.8%	24.1%
비법학출신자	1,988	1,660	1,634	1,490	1,410	1,224	868
	34.5%	29.9%	28.3%	26.1%	26.1%	25.3%	21.1%

* ‘사회인’과 ‘비법학부출신자’는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자료 2-1> 법과대학원 지원자·수험자수 추이



<자료 2-3> 사회인·비법학부출신 입학자수 추이



<자료 2-4> 입학자 선발의 경쟁성과 정원충족

입학년도	2009	2010
전국평균경쟁배율	2.81	2.75
최고경쟁배율	8.51	7.43
주요 6개 대학의 경쟁률	2.72~4.48	2.99~5.26
최저경쟁배율	1.15	1.08
경쟁배율 2.0 미만 법과대학원수	42	40
그 중 1.5 미만	16	20
전국평균정원충족률	0.84	0.84
정원충족률 0.5 미만 법과대학원수	12	13

* 경쟁배율 = 수험자수/합격자수

** 정원충족률 = 입학자수/입학정원

*** 주요 6개 대학 = 도쿄대학, 교토대학, 히토츠바시대학, 게이오대학, 주오대학, 와세다 대학

<자료 2-5> 미수자 코스 입학자의 특성

년	2008	2009
입학자수	3,331	2,823
법학부출신자	2,177	1,877
	65.4%	66.5%
비법학부출신자	1,154	946
	34.6%	33.5%
사회인	1,012	834
	30.4%	29.5%

* ‘사회인’과 ‘법학부출신자’ 내지 ‘비법학부출신자’는 중복됨.

<자료 3-1> 수료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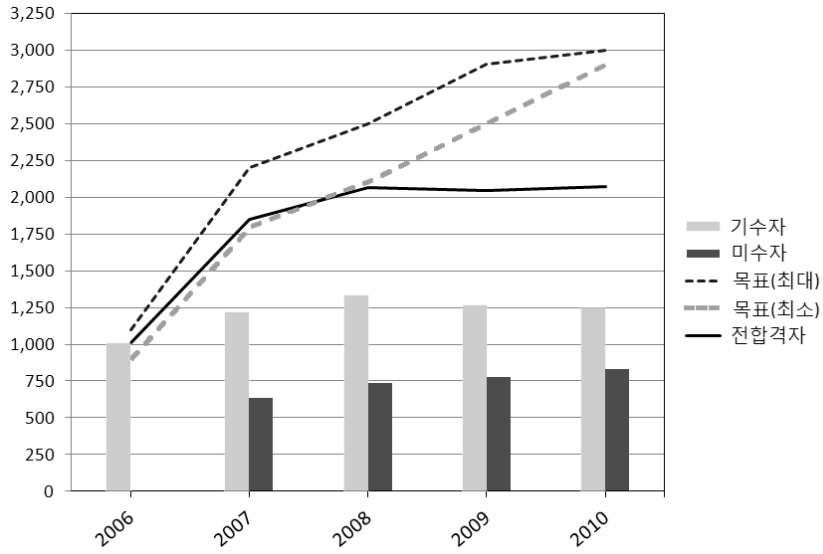
년	2008	2009	2010
수료자수	4,910	4,979	4,772
표준수업년한 수료자수	4,548	4,538	4,263
(표준수업년한 수료자 입학년도 입학자수)	5,673	5,774	5,615
표준수업년한수료율	80.2%	78.6%	75.9
그 밖의 수료자	362	441	509
비수료자	1,125	1,236	1,352
중 구사법시험합격	61	38	22
그 밖의 퇴학	387	464	523
유급·휴학 등	677	734	807

* 표준수업년한 수료자 = 입학 후, 기수자 코스의 경우는 2년, 미수자 코스의 경우는 3년에 수료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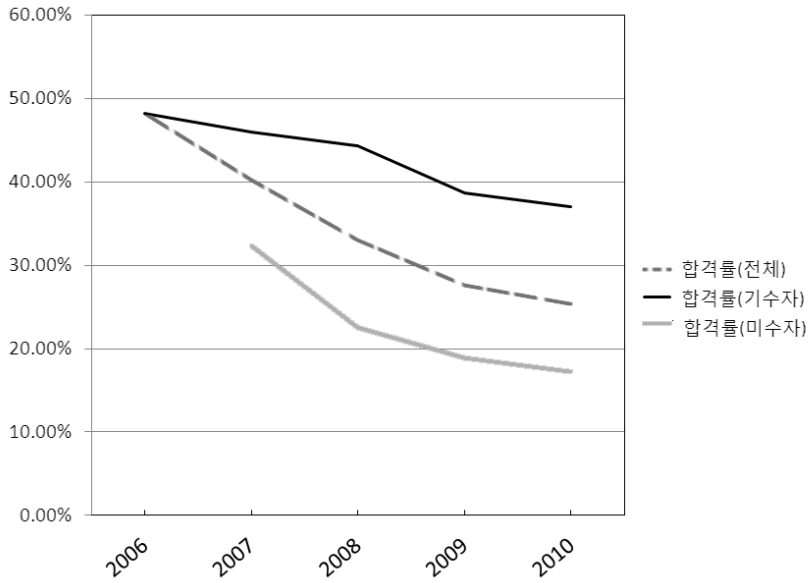
<자료 4-1> 신사법시험 합격상황 (2006~2010)

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격자수 기준		900~1,100	1,800~2,200	2,100~2,500	2,500~2,900	2,900~3,000
전체	수험자	2,091	4,607	6,261	7,392	8,163
	합격자	1,009	1,851	2,065	2,043	2,074
	합격률	48.25%	40.18%	32.98%	27.64%	25.41%
기수자	수험자	2,091	2,642	3,002	3,274	3,355
	합격자	1,009	1,216	1,331	1,266	1,242
	합격률	48.25%	46.03%	44.34%	38.67%	37.02%
미수자	수험자	-	1,965	3,259	4,118	4,808
	합격자	-	635	734	777	832
	합격률	-	32.32%	22.52%	18.87%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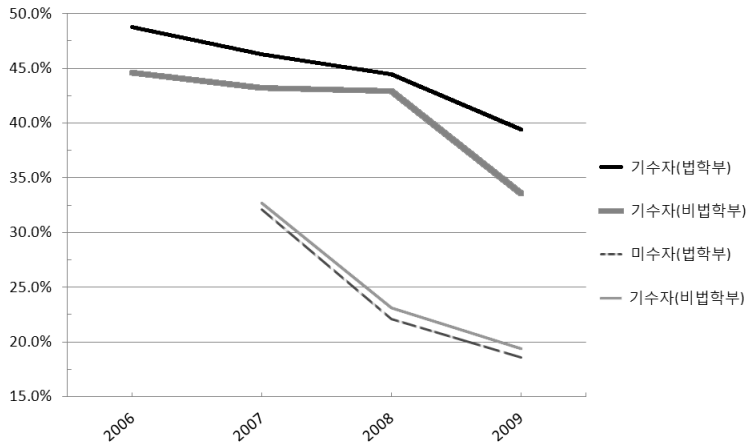
<자료 4-2> 신사법시험 합격자수 추이



<자료 4-3> 신사법시험 합격률 추이



<자료 4-4> 기수·미수·출신학부별 신사법시험 합격률



<자료 4-5> 출신 법과대학원별 신사법시험 합격상황

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합격자수	1,009	1,851	2,065	2,043	2,074
	합격률	48.25%	40.18%	32.98%	27.64%	25.41%
도쿄대학	합격자수	120	178	200	216	201
	합격률	70.59%	58.55%	54.64%	55.53%	48.91%
교토대학	합격자수	87	135	100	145	135
	합격률	67.44%	63.98%	41.49%	50.35%	48.74%
히토츠바시 대학	합격자수	44	61	78	83	69
	합격률	83.02%	63.54%	61.42%	62.88%	50.00%
게이오대학	합격자수	104	173	165	147	179
	합격률	63.41%	63.84%	56.51%	46.37%	50.42%
쥬오대학	합격자수	131	153	196	162	189
	합격률	54.81%	52.40%	55.68%	43.43%	43.05%
와세다대학	합격자수	12	115	130	124	130
	합격률	63.16%	51.57%	37.68%	32.63%	32.75%
합격률이 전국평균의 2/1 미만인 법과대학원수		11	17	26	26	29

<자료 4-6> 법과대학원 수료직후의 신사법시험 수험률·합격률

년	2006	2007	2008	2009
전체	48.3%	39.3%	36.7%	35.0%
도쿄대학	70.6%	58.6%	58.6%	63.1%
교토대학	67.4%	64.0%	45.3%	62.4%
히토츠바시대학	83.0%	61.4%	64.6%	72.9%
게이오대학	63.4%	65.3%	60.9%	55.3%
쥬오대학	54.8%	53.5%	65.4%	53.7%
와세다대학	63.2%	51.9%	39.8%	39.8%
합격률이 전국평균의 1/2 미만인 법과대학원수	11	24	29	30
수험률 70.0% 미만인 법과대학원수	1	12	31	28

* 수험률 = 수험자수/수료자수 × 100

<자료 4-7> 각 년 수료자 중 신사법시험 누적합격자수·합격률

수료년		2006	2007	2008	2009
전체	수료자수	2,176	4,415	4,910	4,979
	누적합격자수	1,518	2,167	2,161	1,963
	누적합격자율	69.8%	49.1%	44.0%	39.4%
도쿄대학	누적합격자율	85.4%	76.2%	71.7%	71.5%
교토대학	누적합격자율	85.1%	71.4%	61.8%	72.7%
히토츠바시대학	누적합격자율	86.7%	81.1%	75.8%	77.2%
게이오 대학	누적합격자율	78.0%	73.5%	72.8%	68.5%
쥬오대학	누적합격자율	76.7%	65.9%	72.6%	65.5%
와세다대학	누적합격자율	85.0%	60.6%	53.1%	48.0%
수료 후 3년 이상 경과자 중 누적합격자율 60% 이상 법과대학원수		32	9	9	
위의 누적합격률 50% 이상 60% 미만 법과대학원수		15	11	5	
위의 누적합격자율 25% 미만 법과대학원수		3	18	31	

* 누적합격자수 = 당해 년 3월 수료자 중, 현재까지 실시된 각 년도 신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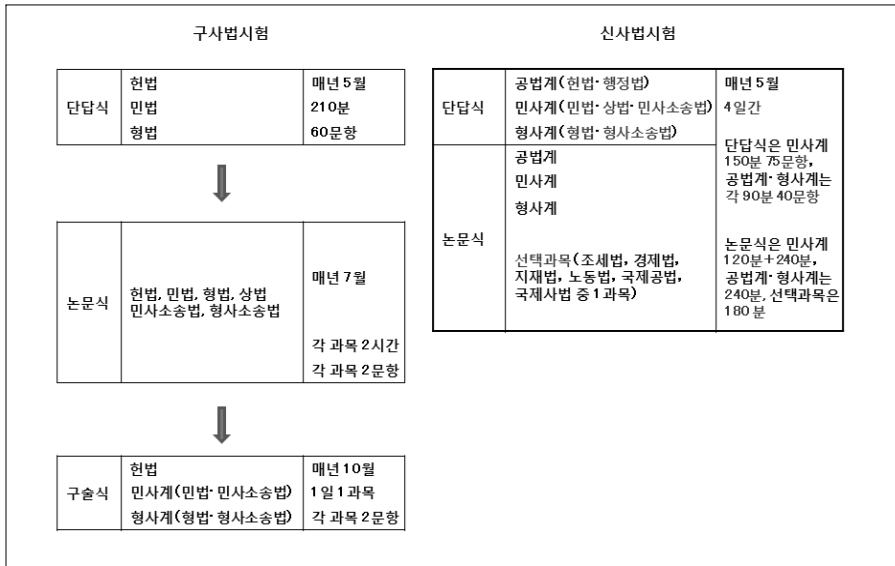
** 누적합격자율 = 누적합격자수/수료자수 × 100

<자료 5-1> 법무성 = 문부과학성 · 법조인양성제도 검토 워킹팀 검토결과(2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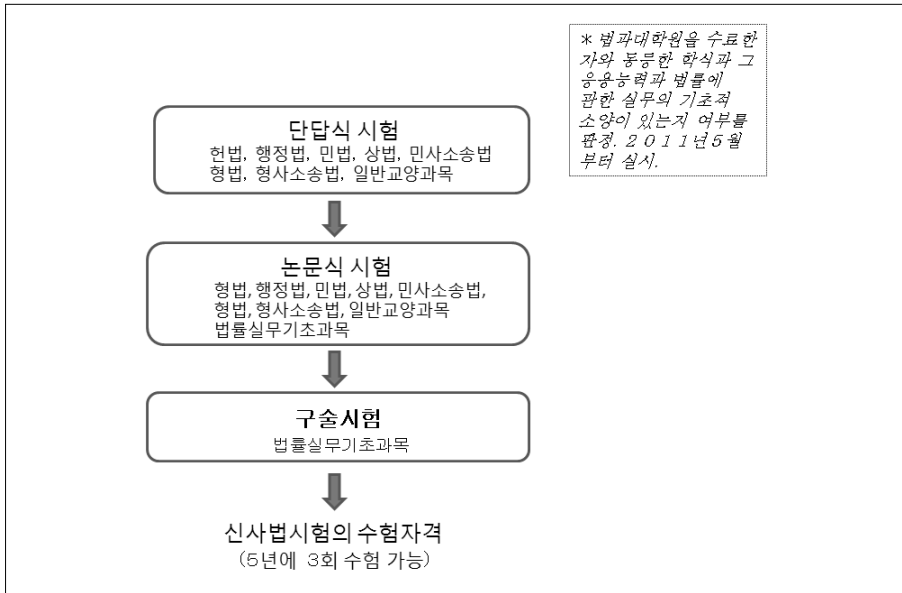
○ 신사법시험 본연의 점에게 대해 지적되었던 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① 시험의 구성 · 내용이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적합한가?
 - 과도한 부담, 특히 법학미수자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는가?
- ② 합격자 결정방법은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 ③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법조인으로 출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문적 지식 · 능력의 내용 · 정도에 관하여 충분히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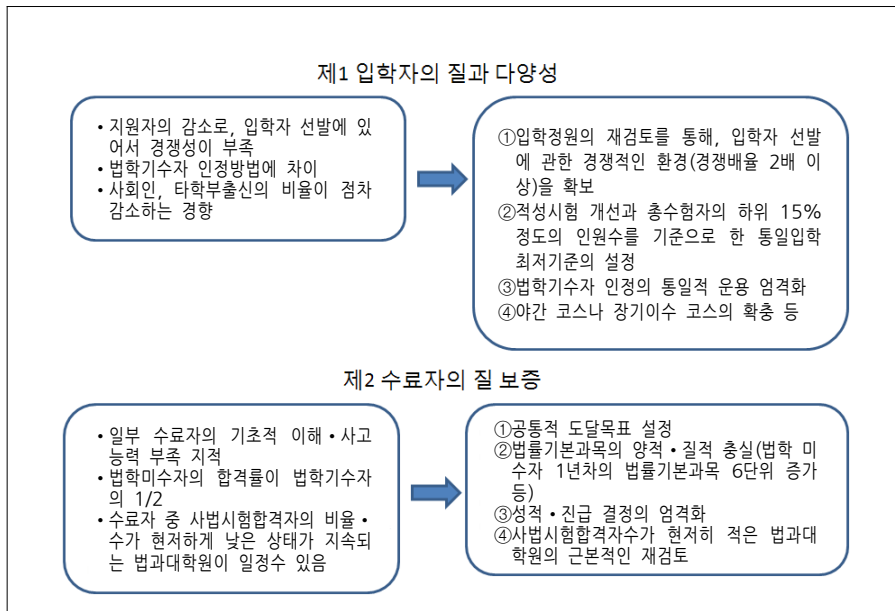
<자료 5-2> 구사법시험(제2차시험)과 신사법시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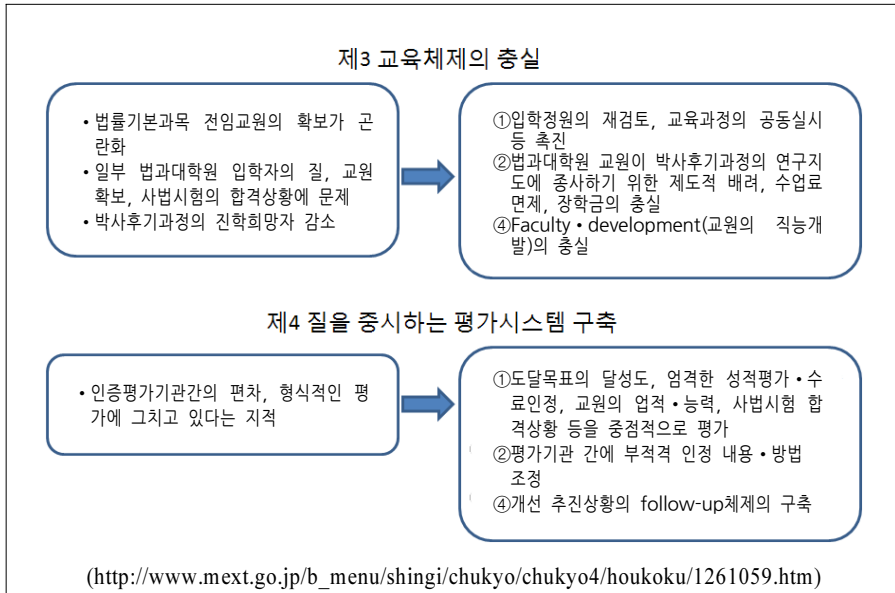
<자료 5-3> 예비시험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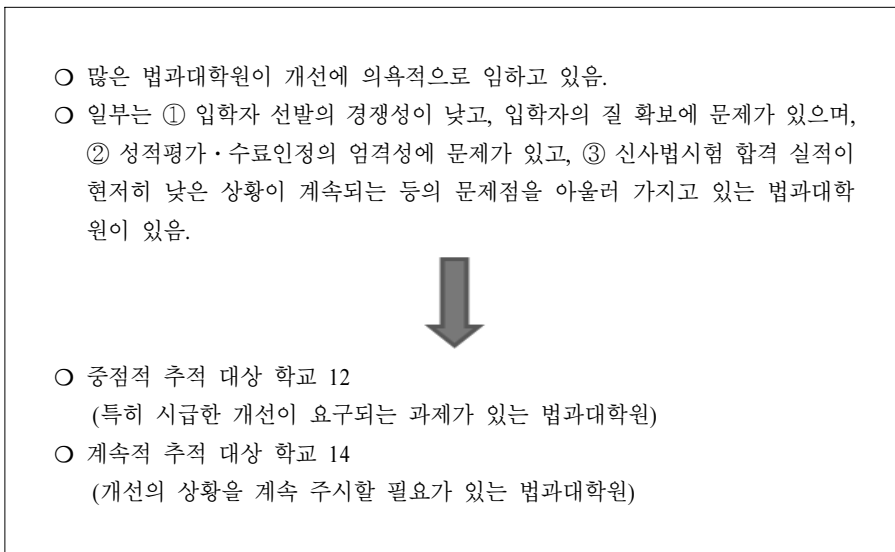
<자료 6-1> 중교심 법과대학원 특별위원회 보고 (2009.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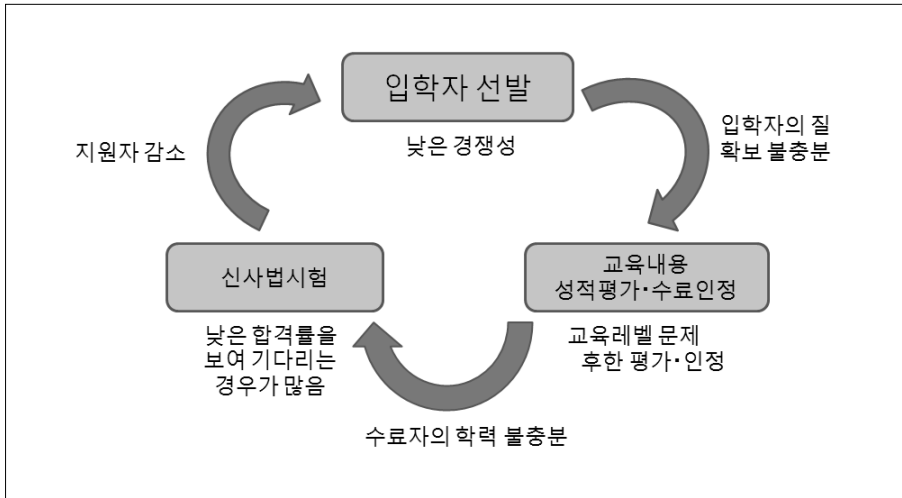
<자료 6-2> 중교심 법과대학원 특별위원회 보고 (2009.4) (2)



<자료 6-3> 개선상황 추적 결과 (2010.1)



<자료 6-4> 부(否)의 나선형(Spiral)



<자료 6-5> 문부과학성 ‘법과대학원의 조직 재검토를 촉진하기 위한 공적지원의 재검토에 대해서’ (2010.9.18)

- 대상 : 다음의 지표에 해당하는 법과대학원
 - (1) 입학자 선발의 경쟁배율 2배 미만
 - and
 - (2) 다음의 상황 중 하나를 3년간 계속
 - ①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전국평균 1/2 미만
 - or
 - ② 법과대학원 수료자 중 수료직후 신사법시험 수험자의 비율이 50% 미만이며, 또한 그 합격률이 전국평균의 1/2 미만.
- 2012년도 예산부터 교부금·보조금을 감액.